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685
----------	------

발의년월일 : 2023. 07. 07.

발의의원 : 김태우, 김정옥,
류종우,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재숙, 하중환,
허시영 의원(9명)

1. 제안이유

- 가.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청년들은 2021년 ‘대구 청년 간병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체적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나. 이에 시 차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과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 다. 기 타 :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